

칼럼

장기채 주필



하절기 위생관리 빈틈없어야

여름철의 환경 위생과 식품에 대한 건강관리는 꼭 중요한 일이다.

더욱 초여름 복병처럼 나타나는 수인성 질병은 해마다 불청객으로 우리의 건강을 괴롭혀 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난 5월 5일이 절기상으로 여름이 시작한다는 입하였지만 어느새 한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걱정거리 앞선다.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위생 관리가 자칫 소홀할 경우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갖가지 질병을 유발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마에 대비하는 것으로 재해 예방과 함께 전염병 예방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흔히 제삿집 음식을 먹고 사경을 헤매는 등 심한 배탈로 병원을 찾는 경우와 생선회 등에 의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는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다. 부패한 과일

이나 꽃과일, 비브리오균이 묻은 생선회 등에 식중독 되는 때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우리 주위의 흔한 양상이었다. 또 다져줄 장마철에는 식품 관리의 부주의에서 오는 위생사 고와 함께 불결한 환경으로 인한 수인성 질환 등 많은 질병이 흔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모기에 물려 뇌염 증상을 앓는 환자도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그동안 과일류의 수입 개방에 따라 홍수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양의 각종 과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소홀했던 탓으로 과일류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던 예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던가. 이같이 당국의 무방비적인 검역 행위로 결국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일부 대형 호텔과 백화점이 당국의 위생 관리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예를 얼마든지 보았다.

하물며 보편적으로 불신이 없어야 할 호텔 등이 그렇진대 일반 시민들이 연일 대하는 대중음식

점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짜증이 먼저 나올 것이다.

식품 유통과정도 마찬가지다. 모든 채소나 청과류 등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농약 첨가, 육류 반입에 따르는 불결한 처리와 운송 과정 등 하나하나 지적하고 보면 끝이 없다.

이제 보건당국은 장마철의 시작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방역대책과 철저한 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자율방역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위생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력의 제도적이고 봉사적인 위생관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이 뒤따라야 한다. 해마다 겪어야 하는 여름철 식중독이나 장마철 질병은 재래적 사고방식이나 안일한 행정으로 처리하는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적어도 국민 전체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가 철저하게 제

되는 사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식품제조업자가 송두리째 뽑혀지지 않는 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식품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생청결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앞에 부끄러움을 사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과거에도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와 함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로 했었지만 '사후약방문' 경으로 한국의 이미지만 추락해버리는 꼴이 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 보건당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식중독에 감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 1조 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등 전염병 퇴치가 근본적으로 국가의 업무이기는 하나 대부분이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주와 종사자들의 청결의식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해마다 겪어야 하는 여름철 식중독이나 장마철 질병은 재래적 사고방식이나 안일한 행정으로 처리하는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적어도 국민 전체의 건강을 저해 하는 요소가 철저하게 제지되는 사회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社 說

이젠 부동산 공급 확대에 눈을 돌려야

정부가 또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최대한 묶고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특히 고가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보유자에 대해선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공포를 견어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정부 정책이 믿음을 얻으려면 이에 수반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제도적 확실성을 견어내야 한다. 작년 하반기 나온 부동산 세제 등 투기 차단책이 발빠른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오히려 투기 광풍을 키웠다. 정부와 여당은 야권을 설득해 작년 12·16 대책과 지난 6·17 대책, 그리고 이번에 제시한 7·10 대책의 뼈대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이면엔 홍수를 이룬 유동성 문제와 함께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이고 서울도 95.9%로 겹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적정 보급률로 여겨지는 110%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도 전국 평균 403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500채 안팎을 보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더구나 현실을 보면 노후주택이 많은데 새집으로 옮겨 가려는 심리는 기본인데다 최근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임대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옮겨타려는 욕구 등으로 인해 수요는 갈수록 커진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억제책을 내놔도 주택에 대한 갈망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이다. 시장 논리는 마스크나 부동산이나 똑같다. 정부는 부동산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과 세제라는 수요 통제에만 매달렸는데 이젠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대 패륜범죄 신고절실

'아동복지법 제30 제7호에 의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학대행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

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신체학대, 그리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하는 정서학대가 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하는 성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

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포함 범위가 있다.

아동학대는 천벌을 받아야 할 중대범죄이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자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아동의 이름, 주소, 학대행위자

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전화로 국번없이 112 관할 지역아동전문기관으로 방문 신고해도 되는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철저한 대응 및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시민들은 철저하게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진병영/여수경찰서 봉사파출소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